

## 한·러 정상합의와 남북협력

### 조한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9월 29일 한·러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협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양국정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외교당국 간 제1차관급 전략대화 및 국방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증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유 가스배관 설치 공동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우주분야 협력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자원, 경제 분야 협력의 대폭 확대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가시적 성과의 도출은 그동안 한·러관계 발전의 경험과 아울러 이명박 정부와 메드베데프 정부 간에 실용주의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4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한반도문제에 대해 주변부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북아에 비해 유럽외교를 중시하는 러시아의 전통적 대외정책과 소련해체 및 체제전환으로 인한 국력 약화라는 러시아의 내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 前대통령의 집권과 아울러 강력한 러시아의 재건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왔고 메드베데프 체제는 이를 계승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는 매우 현실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외교안보적 차원을 우선하는 對서양외교에 비해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연해주 개발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공동사업 추진과 남북 간 정치, 경제, 인도적 접촉의 지속,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소이전이라도 남북경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 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들도 남북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대통령이 제안한 ‘철의 실크로드’, ‘에너지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등 3대 新실크로드건설안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없이는 효율적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대 新실크로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횡단철도(TKR)의 연결,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과 한국 기술력의 연계, 그리고 한·러협력을 통한 연해주의 녹색혁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북한지역의 통과가 필수적이며, 에너지와 연해주 농업 개발의 경우도 북한의 참여 및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남북한과 러시아간의 3각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러시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이자 한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매우 현실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동북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러시아는 잃을 것 보다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의 본질은 실리추구이며, 이는 러시아의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서 對한반도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러시아를 한국의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합의의 실현과정이 북한의 경제위기 해소와 정상화에 유리하다는 점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